



그리스 디폴트 허용에 대한 논쟁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그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리스를 구제하기 보다는 디폴트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.

- 그리스 디폴트 찬성 측은 그리스가 경제 여건상 정부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함.
 - 그리스의 경우 정부부채 규모는 2010년 말 현재 4천 4백억 유로로 GDP대비 150%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EU와 IMF의 구제 금융으로 만기도래 국채를 상환하고 있는 상황임.
 -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국채 이자비용과 2011년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이 -8%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2011년 말에는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0%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.
- 이들은 그리스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리스를 포기하되 ‘질서 있는(orderly)’디폴트¹⁾를 통해 그리스 위기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자고 주장함.

■ G20 재무장관-중앙은행장들은 ① 그리스 민간채권단이 50%의 손실을 떠안는 ‘질서 있는’디폴트를 허용하고 ② 은행자본과 유럽금융안정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짐.

-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G20 재무장관-중앙은행장들이 그리스의 정부부채 가운데 일부를 디폴트하는 ‘질서 있는’디폴트를 허용하되, 그리스를 유로권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함.
- 또한 그리스 디폴트에 대비해 유럽 은행의 자본확충 계획도 제기했다고 밝힘.
 - 은행권 자본확충 규모는 2011년 7월 제2차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 발표된 자본확충 규모(25억 유로)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.
- 유럽금융안정기금(EFSF)의 경우 현재의 4,400억 유로에서 2조 유로로 대폭 확대되는 방안이 제기됨.
 - 그리스 디폴트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EFSF 확대 필요성이 주장됨.
 - 미국의 부실금융자산 구제프로그램(TALP)처럼 EFSF를 레버리지화하여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.

1) 채무상환 위기 압박이 인지된 경우 채권단과 채무국이 채무 구조조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의미함.

■ 이와 같은 '질서 있는' 디폴트 방안은 이미 7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바 있음.

- 2011년 7월 21일 발표된 제2차 그리스 지원 패키지의 경우 민간채권단이 국채 교환 등을 통해 보유 국채 가치의 21%를 손실로서 떠안는 사실상 부분적인 디폴트이며 금번 디폴트 방안과는 부채탕감 규모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음.
- 당시에 그리스 디폴트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대규모로 지원하고, EFSF 기금도 증액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음.

■ 그러나 그리스 디폴트 반대 측은 디폴트 선언 이후 금융기관의 파산을 통제하는 것이 그리스를 구제하는 것보다 비용이 크고 어렵다고 주장함.

- 2008년의 리먼브라더스 사태 시 미국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금융(TARP)으로 7천 8백억 달러를 투입하였고, 미 연준은 2조 3천억 달러를 투입하였음.
 - 미 의회는 최근 미 연준이 비공식적으로 약 1조 2천억 달러를 전 세계 금융기관에 추가 공급했다고 밝힘으로써 미 연준의 전체 자금 투입은 3조 5천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남.
- 막대한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모기지보증 기업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국영화되었고, 연방정부는 씨티은행과 GM 자동차의 대주주이며, AIG를 완전 인수하였고, 3년간 크고 작은 1천여 개의 은행이 파산됨.
- 디폴트 반대 측은 금융위기 당시에는 전 세계가 공조 체제를 이루면서 경기부양책과 신용확대에 수조 달러를 투입했으나, 현재에는 각국 정부가 신용확대 정책을 사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파산 통제가 어렵다고 주장함.

(Financial Times 9/26, Wall Street Journal 9/26, Bloomberg 9/26, Daily Telegraph 9/24)